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6면)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1일 개최한 10월 월례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강력 촉구

의장 조직권·정책지원 인력 확대 요구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과 의장의 조직권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를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최근 마포구청에서 열린 10월 월례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결의문에는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책임을 명시한 법률 제정, 지역 특성과 의정 수요에 맞는 조직 구성·운영 권한 보장 등 네 가지 요구를

담았다. 광역·기초의회 구분 없이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운용하고, 기초의회 사무기구 명칭을 '사무국'으로 통일할 것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오는 2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리는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에도 참여해 법 제정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윤관오 회장은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더라도 의회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권한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며 “독립적인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영 기자 weektypeople@jeonmae.co.kr